

배터리 재활용 뛰어든 GS건설, 규제특구에 첫 투자

(포항)

중기부, GS건설 투자협약식 개최
2022년까지 영일만 산업단지에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시설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투자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차세대 배터리인 2차 전지 재활용 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경북 포항시가 GS건설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첫 사례다.

포항시는 이번 투자금으로 오는 2022년까지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투자는 경북과 GS건설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항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

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에 2차 전지 재활용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생산공장을 위한 3만6000평 부지 토지매입에 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에 300억원, 기계설비 구축에 52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은 지난해 7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됐다. 지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친환경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특구지정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수집→보관→해체→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해 혁신기업 중심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전기차 사용 후 나온 배터리를 전기차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하는 배터리로 재사용하는 실증사업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재활용 실증사업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을 진단해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사업 등이다.

GS건설의 이번 투자는 중소기업만으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워 한계가 있었던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규모 기계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가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터리 재활용 시설 확충 후, 현재 특구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에코프로GEM 등 약 5개의 중소기업은 사용 후 배터리 수집·해체·광물질 분쇄 등 기초작업을 맡고, GS건설 등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모은 광물질(희토류)의 분류 및 정제를 담당한다.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 성장이 기대되는 2차 전

지 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경북은 2022년 이후에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전체 시장의 약 5.7%인 연간 8000억원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시설이 완공되는 2022년 1099개일 전망이며, 2024년에는 연간 약 1만개, 2031년에는 연간 약 10만개, 2040년에는 연간 약 69만개까지 늘 것으로 예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179억원 규모였던 사용 후 배터리 시장규모는 오는 2050년 약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올해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신기술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제2벤처붐을 확산해 벤처 4대 강국 진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올해는 규제자유특구 연계형 특구 제도를 시범 도입해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한민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2년간 방탄복 납기 지체... 조달체계 개선을

"전문기업 아닌 일반기업서 납품
성능통과 제때 못해 벌어진 일"

최근들어 우리 군의 군수품 조달방식이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군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생산기업의 활성화도 그렇다고 군수품의 질적 양적 개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군 장병의 목숨을 지켜줄 다목적방탄복 사업이 2년 연속 납기지체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군 당국도 내부적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올해 다목적방탄복 납품업체는 S사와 W사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납기가 완료됐어야 했다"면서 "W사는 납기일을 지켰지만, 납품량의 다수를 맡은 S사는 아직도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사업청도 입찰 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E사처럼 납기지체가 생길 경우 업체와 군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에게 희망납품수량의 우선권을 주는 조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목적방탄복의 다수 납품사가 납기지체가 된 이유에 대해서 관련 업체는 "조달업체의 자격충족 수준이 낮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군복 및 군장구류 등 생산자격이 주어지는 조건도 낮다보니,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한 업체도 입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업체가 방편성능 통과를 제때 통과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기술품질원은 성능 테스트의 결과는 알려 줄 수 없으나 12월 중순에 성능검사를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행 군수품 조달체계는 입찰 자격을 완화해, 신규업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요군과 업체의 유착을 막는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사업참여 자격이 원활한 군수품 조달과 품질향상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업체들의 사업참여 조건이 완화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최저가 입찰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3형방탄복, 특수작전칼, 응급조치킷 등은 생산업체 또는 전문수입업체가 아닌, 군수품무역업을 갖춘 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구매조달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구매조달은, 국내업체의 직접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군이 정한 구매요구에 맞춘 물건을 업체를 통해 구매대행을 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정품이 아닌 저가복제품이 군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인사 나누는 추미애 장관과 대법원장 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與 “공정한 인사기용” vs 野 “사화 숙청”

윤석열 좌천에 여야반응 ‘극과 극’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이동한 것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과정에서의 검찰 태도를 훈계하며 “공정하고 균형잡힌 인사 기용”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았다”며 “인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는 대거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 지휘하던 검찰 고위 인사도 모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격하게 맞붙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명단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 공방에 대해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듯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집행행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한국당, 총선 앞두고 ‘호남’ 난제극복 고심

전북 10개구 예비후보 등록 전무

‘호남’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TK(대구·경북) 지역에선 후보자가 넘쳐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호남지역 출마는 ‘불나방’이란 평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한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9일 보수권에 따르면 TK 지역에선

한국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광역의원 등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은 총선에 나가려면 오는 16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재 대구에서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4선 주호영 의원(수성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7년 10월 30일 취임한 이 전 청장은 임기를 9개월여 남겨 놓고 지난 7일 퇴임했다.

대표 친박계(박근혜 계파) 과상도의

원의 지역구 중·남구에선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장원용 전 대구시소통특보가 한국당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 확보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사퇴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경북 고령 출신이지만, 대구 북구에 있는 성광고와 경북대를 나왔다. 조선 정태욱 의원 지역구인 북구갑에서 한국당 공천에 도전할 공산이 크다. /석대성 기자